

#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내적 긴장

- '애국계몽운동' 재고(再考) 시론(試論) -

이 헌 미\*

## ■ ——— 《目 次》 ———

- |                |            |
|----------------|------------|
| 1. 애국과 계몽 사이   | 3. 계몽의 변증법 |
| 2.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 4. 마치며     |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숙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숙의 원인이 오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What is enlightenment)?”<sup>1)</sup>

“무릇 애국자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가 저절로 강해질 수는 없고 반드시 민지(民智)가 개인 연후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민력이 모인 연후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발휘하는 조리(條理)가 단일하지는 않지만, 요약하면 반드시 연합과 교육의 두 가지로써 기점(起點)을 삼아야 하니, 한 사람의 애국심은 그 힘이 매우 미미하고, 여러 사람의 애국심을 합하면 그 힘이 매우 크다. 이것이 연합이 핵심이 되는 이유이고, 애국이라는 빈말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 지나에시객(支那哀時客) 저, 박은식 역술, 「애국론」<sup>2)</sup>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 「국제워크숍: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아이덴티티」(2007년 9월 13~14일) 발표논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박사과정

1) “Enlightenment is man’s emergence from his self-inflicted immaturity. Immaturity is incapacity to use one’s own understanding without the guidance of another. This immaturity is self-inflicted if its cause is not a lack of understanding but a lack of courage to use understanding without the guidance of another. *Sapare Aude!* Dare to know! Be guided by your own understanding! This is the watchword of enlightenment.” in Hans Reiss(ed.), 1970 *Kant’s Political Writing*, London: Ward Lock.

## 1. 애국과 계몽 사이

한국근대사에 있어 '애국계몽운동'이란, 1905년 11월 제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에 의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의해 일체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갈 때까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개화자강파에 의해 전개된 민력계발과 민족독립역량양성운동을 총칭하는 역사적 개념이다.<sup>3)</sup> 그러나 '애국'과 '계몽'이 이처럼 사이 좋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애국'과 '계몽'이 각각 표방하는 정치적 가치들 사이에 궁극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내적 긴장이 존재한다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전(前) 식민지 단계의 일련의 정치개혁 노력의 실패 내지 한계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이 때 해결되지 못한 '애국'과 '계몽'이라는 사상사적 주제는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주되고 있지는 않은가?

'애국(愛國)'이란, '국(國)'이라는 제한된 정치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며, 기본적으로 특수주의적(particularist) 성향을 가진다. 그것은 내적인 통합과 단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이며, 정치사상 내지 정치운동으로서 근대 내셔널리즘의 핵심 표어로 기능해 왔다. 그에 비해, 18세기 구미에서 시작된 계몽운동은 인간 이성을 모든 권위의 기초로 보고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이성적 재편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 자연권, 시민적 권리 보장, 정부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계몽'은 공통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서 '과학'을 신봉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universalist)이고, 모든 개인을 이성적 사고의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다. 그렇다면 '애국'과 '계몽'으로 표방되는 정치적 가치들은, 다시 말해 내셔널리즘과 자유 민주주의 사이에는, 모종의 불화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이 논문에서는 '애국'과 내셔널리즘을, '계몽'과 민주주의를 연결시켜 정치이념으로서 이들 사이의 내적 긴장의 문제를,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한국의 특수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sup>4)</sup>

2) "夫愛國者 欲基國之強也라 然이나 國이 非能自強이오 必民智開然後에 能強焉이오 必民力萃然後에 能強焉이라 故로 愛國之心으로 由호야 發出호는 條理가 不一其端이나 要之컨디 반드시 聯合과 教育의 二事로써 爲之起點이니 一人의 愛國心은 其力이 甚微호고 衆人의 愛國心을 合호면 其力이 甚大호지니 此 聯合이 所以爲要也오 空言愛國은 無救於國이라", 『愛國論』 『서우』2호, 1907.1.1.(『清議報』 6·7·22)아세아문화사 영인본 84-85면, 1899).

3) 신용하, 1983 「한국사회와 한국사회과학 : 한국근대사연구의 기본과제」 『사회과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8면.

4) '애국'이나 '계몽'이라는 개념에 본질적으로 내셔널리즘이나 민주주의와의 친연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대상시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 '애국'과 '계몽'의 역사적 어의(historical semantics)를 논하고 있을 따름이다. 애국-민주주의, 계몽-민족주의를 교차편집 못 할 이 유도 없다. 실제로 비롤리(Maurizio Viroli)에 따르면, 유럽의 애국심(patriotism) 개념은 원래 공화국

## 2.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동아시아 근대 초기의 정치사상사 연구에 있어 이 문제는 종종 국권론(國權論) vs. 민권론(民權論)이라는 대립구도로 파악되어 왔다. 그리고 아시아 근대화의 우등생 메이지 일본의 역사발전경로에 맞추어, 서구 열강의 위협 속에서 국권론이 민권론보다 우세해진다는 내러티브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1904년 제 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과 외교의 실권이 일본측에 넘어간 고문정치가 실시되었다. 1905년에는 공식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1907년 고종이 강제로 양위당한 뒤 한일신협약에 의해 통감부가 입법·사법·행정 전반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고, 한일경찰이 통합되었으며, 헌병경찰체제가 확립되었다. 1910년에는 주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애국계몽운동기의 ‘애국’은 무엇보다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고, 주권을 보지(保持)하는 것이었다.

근대로의 이행기로서 전통적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중첩적으로 공존하던 이 시기에는 ‘국(國)’ 자체의 개념이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구질서를 상징하는 왕조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했던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왕조들이 조공책봉체제를 유지했던 전통 천하질서와, 형식적으로 동등한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이 세력균형원리에 따라 병립하는 서구 근대 국제체제에 각각 상응한다. 이 시기 한국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일련의 국내외적 논쟁은, 정치공동체의 단위로서 ‘국(國)’이라는 개념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국과 각 당파에 의해 끊임없이 재정의 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sup>5)</sup> 이것은 담론의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으니,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천하질서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근대국제체제의 조약 주체로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개입 내지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한 뒤 식민지화시키는 방법은 이미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사용했으며, 일본의 대한정책 또한 그 전철을 밟았다.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는 이제 속국과 독립국이라는 이질적인 근대적 이분법으로 재구성되었고, 이에 한국은 논리적으로는 ‘양절(兩截)’론을, 현실적으로는 중립국 구상을 통해 주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잇달아 승리한 일본의 행보는 그러한 여지를 용납하지

(republic) 및 자유(liberty)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19세기 민족주의의 영향이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헤르더(Herder)에 의해 18세기 말에 사용되기 시작해서 19세기가 되어서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19세기에는 관계가 역전되어 ‘애국심의 민족화(nationalization of patriotism)’가 일어나는 것이다. Maurizio Viroli, 1995 *For love of country: an essay on patriotism and nationalism* Oxford, UK: Clarendon 참조.

5) 이와 관련해서는 姜東局, 2004 『「屬邦」의 政治思想史: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地位問題」をめぐる言説の承譜』(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岡本降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運命』, 名古屋大學出版會 참조.

않았다.

1906년 9월 『대한자강회월보』3호에서 이미 “국가는 국민백성의 공동체이니 군주 일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 옛날 한나라 선비 맹자 가로되 민이 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그 다음이라 하니, 무릇 그 말한바 민과 사직은 곧 국가를 말하는 것인 즉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국가와 군주의 선후경중을 알 수 있을진저(國家는 國民萬姓의 共同體니 君主一人의 私有物이 아니라 … 昔에 漢士孟子曰호되 民이 爲重이오 社稷이 其次이며 君이 又其次라 하니 夫其謂호 바 民與社稷은 卽國家를 謂호인즉 是를 由호야 觀호되 國家及君主의 先後輕重을 可知호되.)<sup>6)</sup>”라고 하였고, 또, “무릇 군주가 국가의 통치자라 말함은 가하나 국가의 사유자라 말함은 불가하니 … 토지와 인민이 타국의 관할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나라 안의 황실의 변화와 정체의 변경으로는 국가가 망했다 말함이 불가하니라(夫君主은 國家의 統治者라 謂함은 可호되 國家의 私有者라 謂함은 不可호니 … 土地人民이 他國의 管轄에 不歸호되 其國內皇室變易과 政體變更으로는 國家가 亡호다 謂호미 不可호니라.)”<sup>7)</sup>라고 하였다. 국가를 왕조나 정체와 구별되는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토지와 ‘인민’이라는 국가의 실제적 구성요소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명백히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논문 서두에서 인용한 「애국론」의 다른 부분에서 량치차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청컨대 전 지구인에게 바로 알리노니 우리 중국인이 애국의 성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애국을 모르는 이유는 중국의 국(國)됨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고로 일통(一統)이라 수천 년 이래로 독립의 형세에 항상 처해서 천하라 말하고 국이라 말하지 않았으니, 위낙에 국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애국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哀時客은 請컨디 全地球之人에게 正告호노니 曰我支人이 非無愛國之性質이라 其不知愛國者는 其國이 됨을 自知치 못호므로 由호되 中國은 自古一統이라 數千年來로 獨立之勢에 常處호야 天下라 謂호고 國이라 謂치 아니호얏스니 旣無國矣라 何愛之可云이리오.)”<sup>8)</sup> 이것은 원래 1899년 『청의보』에 실렸던 것이지만, 박은식은 이를 번역하여 1907년 『서우』에 실고 있다. 1907년의 시점에도 여전히 ‘애국’의 대상으로서 ‘국’의 내용은 이처럼 분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1905년 통감부가 들어섬에 따라, 애국계몽기의 지식인들은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의 민족(nation)과 국가(state)가 분열되는 정신적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제 ‘애국’에서 ‘국(國)’이란 사실상 국가행정기구를 일본에 빼앗긴 한민족을 의미한다. 1907년 5월 1일에서 4일까지 황성신문에는 오늘날 나라는 한 사람이나 가족의 소유가 아니므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왕조를

6) 「國家의 本義」 『대한자강회월보』3호, 1906.9.25(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4-215면).

7) 「國家及皇室의 分別」 『대한자강회월보』3호, 1906.9.25(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5-216면).

8) 「愛國論」 『서우』2호, 1907.1.1(아세아문화사 영인본 82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라는 량치차오의 논설이 전제되었다.<sup>9)</sup> 식민 국가(colonial state) 일본을 조선민족의 '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타협적 내셔널리즘을 가장 강하게 표출한 것은 신채호이다. 신채호는 내셔널 히스토리가 스테이트의 역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글 「독사신론」에 따르면, 민족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스테이트의 차원보다 위에 존재한다. 역사란 스테이트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다. 신채호는 '민족'을 역사창조의 주체이자 역사서술의 중심대상으로 세웠다. 민족의 족적을 추적해 올라가는 데에 있어 단선적이고 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보의 역사가 절대 아니었다. 시간에 따른 진보의 관념은 문명개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했는데, 그러나 문명의 이름 아래 보호정치 하에 놓인 민족으로서, 신채호 역사의 동학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시험이며, 이 시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채호는 일본 식민화 프로젝트를 '계몽'으로 합리화하려는 주장을 배격하고, 역사를 일본에 대한 저항의 장으로서 제시한 것이다.<sup>10)</sup>

이처럼 애국계몽기의 국가 개념은 (i) 구체제의 왕조국가 (ii) 근대적 식민행정 당국 (iii) 역사적 과제로 실현되어야 할 한국 민족국가라는 삼중의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 애국계몽운동기 지식인들은 '애국'을 논할 때, (i)과 (iii)를 동시에 지양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었다. (iii)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구체제일지언정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iii)의 과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ii)처럼 정치 개혁을 통해 우리 국가를 근대화해야 한다. 이처럼 모순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민이 표현된 의제가 흥정헌정론(欽定憲政論), 즉 입헌군주정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구한말 조선은 구체제에 누적되어온 사회적 불평등과 비효율로 인해 각종 민란이 빈발하였다. 봉건적 신분사회와 왕조 체제의 현상 유지가 조선의 근대로의 진입 혹은 역사발전을 저해한 내적 요인이라고 할 때,<sup>11)</sup> 궁극적으로 왕실은 정치적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제 대신 입헌군주정이 선호된 것은 애국계몽운동기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신중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 3. 계몽의 변증법

위정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준비는 정치적 근대화의 중요 지표이다.

9) 「滅國新法論」 『황성신문』 15(경인문화사 영인본 2-14면).

10) Andre Schmid,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90-191.

11) 이용희·신일철 대담, 1972 「사대주의: 그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知性』2,3월호; 정용화, 2005 「주변에서 본 조공체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114면.

19세기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국가 철학으로서 각각의 헌법 이론이 활발히 개진되었고, 1883년의 한성순보에도 이미 영국의 삼권분립 제도가 소개된 바 있다.<sup>12)</sup> 1895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었고, 애국계몽운동기에 들어서는 〈국가학〉, 〈국법학〉, 〈헌법〉, 〈행정법〉 등의 단행본 교과서가 다수 발행되었다.<sup>13)</sup> 한편, 1905년 5월, 독립협회와 공진회(共進會)에 관여하였던 집단과 개신유학자들이 모여 헌정연구회(憲政研究會)를 설립하였다. 헌정연구회는 평의장직을 맡아 헌정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윤효정(尹孝定)이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된 데에 항의한 건으로 체포됨으로써 해산되었다. 석방된 윤효정은 1906년 3월 대한자강회의 창립을 주도하는데, 여기에는 윤효정을 비롯하여 이준(李儆), 심의성(沈直性), 홍필주(洪弼周), 이원규(李源鏡), 이기(李沂), 노일수(盧日壽), 윤병(尹秉), 유진형(兪鎭衡), 최강(崔岡), 김우식(金宇植) 등 헌정연구회에 참여했던 인물이 다수 참가하였다. 대한자강회에는 회장 윤치호를 비롯하여 지식영(池錫永), 정교(鄭喬), 이상재(李商在) 등 독립협회 계열의 인사와,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의 장지연(張志淵), 신채호(申采浩), 제국신문사(帝國新聞社)의 이종일(李鍾一), 남궁준(南宮濬), 정운복(鄭雲復), 대한매일신보사(大韓每日申報社)의 양기탁(梁起鐸), 박은식(朴殷植) 등 신문 관련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sup>14)</sup> 대한자강회는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양위되고 황태자의 대리청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대하여 격렬하게 시위하다가 1907년 8월 21일 보안법이 적용되어 강제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가 해체된 뒤 상당수의 회원들은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의 설립과 운영에 참가하였고,<sup>15)</sup> 남궁준, 윤효정, 장지연, 정운복, 홍필주는 1907년 11월 대한협회(大韓協會)를 창립하였다.<sup>16)</sup>

위에서 알 수 있듯, 헌정연구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는 인적 구성과 활동 면에서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연구회나 협회 등 학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대한자강회는 소수 지식인으로 이루어져있던 헌정연구회와는 달리 전국적 대중조직을 지향하면서 본격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다른 계몽운동단체, 학회 설립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의 경우 당시 일본 헌병대의 기밀문서에서 '정당'으로 분류될 정도였다.<sup>17)</sup> 이들의 회보에 실린 논설들 또한 정치학과 외교학, 법학 관련 내용이 상당했다. 대한자강회월보에는 정치 부분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논의와 법률부에서 만국공법(萬國公法), 개인의 법적권리에 관한 글들이 게재되었고, 대한협회회보에는 당시 현실과 관련하여 국가론, 정치론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12) 『英國誌略』 『한성순보』 제 6호, 1883. 12. 20.

13) 김효전, 2003 「한국에서의 독일공법이론의 영향」 『한독법학』 14권, 335-336면.

14) 최기영, 1992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조항래 편저), 아세아문화사, 34면.

15) 정관, 1982 「구한말 애국계몽단체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제 20·21 합집, 대구사학회, 25-26면.

16) 이현중, 1992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위의 책(조항래 편저), 146면.

17) 이현중, 위의 글, 182면.

구사되고 있다. 특히 김성희의 글 같은 경우 국가론, 정치론, 정당론, 경제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정치운동의 논리를 총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이 민약(民約)에 기초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인민에 의한 직접 지배와 공화제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언제나 결론은 입헌군주제와 흥정헌법이었다. 그 이유는 헌정연구회 취지서의 다음 구절이 잘 설명해준다. “18세기 이래로 헌법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전 지구의 대세가 되어…영국이나 일본은 온화한 기운으로 [이러한 대세를 맞은 자이고, 미국이나 불란서는 난폭하고 거세계 [대세에 이른 자이다. 온화한 기운으로 맞는 자는 반드시 군주헌법을 삼고, 난폭하고 거세계 이른 자는 반드시 민주헌법을 삼으니…무릇 대한의 신민된 자로서 누가 감히 난폭하고 거세계 이르는 것을 원하겠는가…군치헌법을 논하면 곧 왕실이 행동하여 다스림이 존영하시고 보배로운 실록이 이어져 힘쓰지 않아도 더욱 편안하며 정부에 전임하는 직권을 두고 인민이 자유의 석방을 얻어서 상하 협력하고 조화하여 나라가 이로써 안녕한 것이니…”<sup>18)</sup>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정치적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반혁명과 점진적 개량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이다.

이제까지의 논자들은 공히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로서 부르주아 엘리트 중심의 개량주의를 들고 있다. 운동의 주체가 군주제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배 계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나마 내부적으로도 단합하지 못했으며, 관념적 차원에 머물렀을 뿐 운동을 조직화하여 민중역량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애국문화운동의 상층은 자기 활동을 애국정신과 선진 지식을 보급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중을 혁명적인 투쟁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상층 자체가 통일적 역량으로 결속되지 못하고 편협한 지방주의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애국계몽파는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지만, 직접적인 용어로 ‘국민국가’이론을 펴고 공개적으로 ‘국민국가의 구조’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론의 무대만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0)</sup> 라는 평가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애국계몽운동기에 논의되었던 교육사상 전체의 역사적 성격을 정리해 본다면, 여기서 주장된 국민교육은 기본적으로는 항일정신=민족주의를 중핵으로 하는 대중 교화로서, 민중을 국권회복의 길로 끌어들이며 결국에는 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민족

18) “蓋自十八世紀 以來로 憲法治術이 爲全地球之大勢 亨야…若不和氣而迎 卽必因暴烈而至 亨야 所在列國에 不至卽不止 亨야 如英如日은 是和氣以迎者也 如米如法은 是暴烈而至者也라 和氣以迎者는 必爲君主憲法이오 暴烈而至者는 必爲民主憲法이니…凡爲大韓臣民者 不孰敢願暴烈而至者乎며…論君主憲法 則 帝室이 亨統治之尊榮 亨시고 寶錄이 延無疆之惟休 亨시며 政府에 有專任之職權고 人民이 得自由之釋放 亨야 上下協和 亨야 國以永寧者也니”, 『헌정연구회 취지서』 小序(최기영, 위의 글, 16면에서 재인용).

19) 『조선전사』 14권, 235, 255면(노영택, 2000, 『한말 국민국가건설과 국민교육』, 신서원, 368면에서 재인용).

20) 유영렬, 1993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일조각, 311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sup>21)</sup>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 김도형은 이들의 계몽운동과 정당정치 활동이 “국법의 범위 안에서 치안을 방해하지 않는 활동만 추구하였던 점”<sup>22)</sup>을 특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란 무엇인가?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것 또한 우리는 정치로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 저항적 내셔널리즘은 절대 선인가? 구성원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는 정치공동체는,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든, 왕조든, 제국이든 정당한 것인가? 해방 이후 한국민족주의가 국가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세 가지 이념적 상으로 분기되었다고 할 때,<sup>23)</sup> 애국계몽운동시기의 내셔널리즘에는 이 세 가지 이념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이제까지 가장 간과된 부분은 바로 자유주의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계몽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주의가 일정 부분 저항적 내셔널리즘과 불화하고 식민 국가의 근대적 행정 및 통치와 내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식민주의는 정반대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몇몇 미학적 전략과 경제적 개혁 노력은 분명 세계사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근대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공통된 지향과 지적 계보 때문에, 독립에의 외침과 식민화의 명령 이면에서 한국 민족주의자들과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개념어(*conceptual vocabulary*), 문화적 표상의 주제들(*themes in cultural representation*), 이야기 전략(*narrative strategies*)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공유했다.<sup>24)</sup>

우리 학계를 휩쓴 대한제국 평가 논쟁이나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셔널리즘을 정치공동체의 단위 측면에서 진행된 근대화의 산물이었다고 파악할 때, 내셔널리즘은 사회, 경제, 학문과 사상 등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근대화의 결과와 함께 그 도덕적/정치적 가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 경우 내셔널리즘은 근대화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우선하여 무조건 선이 될 수도 없고, 그 자체만으로는 제국주의 비판의 윤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대립항이 아니라 오히려 표리를 이룬다. 릴라 간디가 지적한 대로, “문제는 반식민 민족주의 학습이 역설적으로 (식민) 억압자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이라는 것과, 오히려 19세기 식민주의의 탐욕스러운 영토적 에너지 그 자체가 19세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sup>25)</sup> 국문학자 김윤식 또한, 일제시대의 ‘이식(移植)문학’을 우리 국문학사에 편입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자본주의·민족주의·제국주의는 이복형제이다. 민족주의로써 제국주의와 싸울 수 없음을 자명한 원리이다. 그럼에도 민족주의의 형식을 띠면서 반제투쟁의 문학을 전개하는 일은, 기실은 허무주의.

21) 윤건차, 1987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345면.

22)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11면.

23) 제1회 동주기념 학술회의, 「동주 이용회와 한국 국제정치학」(1998년 12월 4일 자료집), 84면.

24) Andre Schmid, *op.cit.*, p.102.

25) 릴라 간디, 2000(1998)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144면.



아나키즘. 코뮤니즘으로써 대결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투쟁의 사상이란, 실상은 단재 신채호의 아나키즘밖에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러나 그 아나키즘은, 일종의 허무주의가 아닐 것인가. 절대적 세계를 전제로 한 아나키즘인 만큼 상대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갈데없는 허무주의에 지나지 못한다.”<sup>26)</sup>라고 말한다.

애국계몽기와 이후 식민지시기에 걸쳐 소위 실력 양성론자들이 어떤 미래의 역사적 시간에 수립하고자 했던 한국 민족국가는 무엇보다도 ‘근대화’된 국가였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를 담당하는 주도세력 내지는 계층이라고 하는 인간상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근대화가 달성될 수 있겠는 가라는 문제제기”<sup>27)</sup>가 없을 수 없다. 그 경우 “국민주의가 몰고 오는 민권의 문제는 평시에 이러한 개(個)와 개를 통한 사회적 권리의 주장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 이러한 개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심지어 기준잡기 어려운 개의 행복권까지 문제되는 것은 기실 이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내셔널리즘의 자기지양인 면이 있다.”<sup>28)</sup> “여기에는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이율배반적인 것 혹은 식민지성을 정치경제적인 의미에 한정하여 바라보는 사고를 거부하는 자세가 있다. 식민지성은 근대성의 본질인 주체의 해방, 자아에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함으로써 식민지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노력 자체에 이미 근대성/모더니티가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해방식에는 근대성을 해방 지향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이로부터 식민지성이라는 것은 근대성의 이중적 성격, 즉 근대성의 한 가지 발현형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sup>29)</sup> 결국,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한국에서 애국과 계몽은 ‘애국계몽’으로 봉합되어 있었지만, 계몽이란 무엇보다도 해방된 개인이 자유, 평등, 재산, 참정의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정치적·역사적 주체로 나서는 것임을 상기할 때, 애국과 계몽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국가와 피식민 한국 개인주의의 공모, 심지어 (1920년대 실제로 전개되었던 식민지 자치론 및 참정권 운동과 그 실패를 상기하면서) 식민국가와 자유 민주주의의 결탁 가능성까지도 이제 정치사상적으로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를 전후하여 단절되어 있는 한국 정치사상사의 연속성 있는 이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 근대정치사 및 정치사상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이 한국 근대 국가 및 내셔널리즘의 형성 과정에서 수행한 사회적 역할이 다시금 환기될 필요가 있다. 서구적 교육을 받은 신지식 계층이 정계와 재계로 흡수 재편된 일본의 경우와 달리, 식민국가의 행정기구에 포섭되기를 거부하고 식민사회에서도 이탈한(이민, 망명) 재야(在野) 지식인 집단의 존재 자체가 한국적 특수성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들이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의 실패 이후 1910년까지 벌였던

26) 김윤식, 1987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92면.

27) 「동주 이용회와 한국 국제정치학」, 93면.

28) 이용회, 1975 「민족주의의 개념」 『한국의 민족주의』, 한국일보사, 233면.

29) 윤건차, 2000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 지식인과 그 사상 1980~90년대』, 당대, 273면.

‘애국과 ‘민주’의 이중게임(double-edged game)은 해방 이후 한국정치의 사상과 행태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역사의 창조와 재현, 양쪽 모두에서 이들은 왕조사와 민중사 사이의 매개자로 기능하였다. 대중을 계몽하고 설득하는 지식인의 존재야말로 정치에 있어 그러한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근대화의 특징이며, 민주주의의 사회적 장치라고 하겠다.

#### 4. 마치며

1866년 병인양요로 최초로 서양과 충돌하고 1910년 일제에 병탄됨으로써 주권이 상실될 때까지 약 50여년의 기간은, 한국인의 인식이나 의지와는 별개로 진행된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간이다. 1910년, 그것이 낡은 의미에서 조선왕조이든, 독립협회 이후 개화파의 유산된 꿈으로서의 미래의 근대국가이든, 나라가 망했다. 조선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논쟁이 담론의 영역이 아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라는 현실 정치적 사건에 의해 결론지어진 것처럼,<sup>30)</sup> 나라가 망함으로써 애국계몽운동 또한 일체의 노력이 무로 돌아간 듯 보였다.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현실이 이념이나 사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동아시아나 후발국가, 약소국에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계몽운동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계몽적 가치의 근원으로서 서구 사상에 대한 강한 관심, 근대의 상징인 비판적 이성의 진흥, 봉건적 윤리로부터의 자율과 해방,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를 입으로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정치적 권위주의로 귀결되었다고 비판받는다.<sup>31)</sup> 그런가 하면 일단 식민지로 병탄된 1910년 이후 한국에서, 민족이 먼저냐 문명이 먼저냐에 대한 민족주의자의 딜레마는 문명이 먼저라는 식민주의에 의해 해결되었다고들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통치체제의 본질적 변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과 계몽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적 개혁을 앞세워 차치해 버림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일본식 절대주의 군주체제를 답습해 가는 개화개혁 사상의 한계”<sup>32)</sup>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된다. 이러한 평가는 사후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민족이나 계몽이나의 대당(對當)으로 이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자율과 해방의 과정으로서 계몽의 본질을 놓친다. 이미 서구에서는 계몽의 허구성이나 자기당착성에 대한 자기비판이 있는 지 오래다. 그러

30) 姜東局, 2004년 5월 29일 전파연구모임 발표문.

31) Michael Y. L. Luk, March, 1989, Review article of *The Chines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and the Legacy of the May Fourth Movement of 1919* by Vera Schwarcz, *The China Quarterly*, No. 117, pp.155-156.

32) 임승표, 1986 「유길준과 정관용의 정치관 비교」, 『홍익사학』3, 192면.

나 '계몽'은 서구로부터 온 것이므로 서구적인 것이고, 식민지(colonizer)로부터 온 것이므로 식민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에 계몽은 없다.

계몽이 없다면, 없는 대로 좋은 것인가? 1948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근대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전전(戰前)일본은 서구를 답습하는 데 우등생이었는데는 몰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의 진정한 진보에는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사회적 조건상 해방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길이 없는 길을 가는 저항"으로서 루쉰이 상징하는 중국적 근대성을 옹호하였다.<sup>33)</sup> 이것은 일견, 반(反)계몽의 근대화 기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쑨제(孫歌)는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의미에서 계몽이라고 보았다. "중국 근대정신의 혼인 루쉰에게 〈학문〉은 나라 위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자체도 큰일이지만 학문이라는 문화 전통의 형성은 훨씬 큰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설에서는 국민성의 개조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루쉰이 자기 일생을 걸고 했던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근대를 낳은 사상적 전통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자는 국가라는 틀을 분명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sup>34)</sup>

오늘날 구미의 학자들은 애국심의 국수적 편협함을 비판하면서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을 대안으로 내세우거나,<sup>35)</sup> 민족주의를 뺀 애국심(patriotism without nationalism)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sup>36)</sup> 우리는 아시아 공동체론이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중·일 삼국 간에 불화가 더해가고 있는 역사논쟁이 놓여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보편 윤리의 기준에 따라 애국심이 세계시민적 덕성으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선부르다. 애국심은 매우 향토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개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지역정치에 애국심이 아니라 애아심(愛亞心)이 요구된다면, 그 전제로서 무엇보다 '아시아'라는 단위가 정치공동체로서 유효한 실체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100년 전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시작한 '계몽'의 기획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주제어 : 애국, 계몽, 애국계몽운동, 민주주의, 내셔널리즘, 지식인

접수일(2008.4.8), 심사시작일(2008.4.25), 게재확정일(2008.5.14)

33) 다케우치 요시미, 2004 「근대란 무엇인가」, 『다케우치 요시미 평론선: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8면, 47면.

34) 高橋哲哉 編, 2002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중 「(孫歌)특별인터뷰: 동아시아가 역사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가?」.

35) Martha Nussbaum with Respondents, Joshua Cohen ed., 1996,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Boston: Beacon, 참조.

36) Viroli, *op.cit.*, Epilogue: Patriotism without Nationalism. 여기에서 저자는 하버마스(Habermas), 매킨타이어(MacIntyre), 왈쩌(Walzer), 테일러(Taylor) 사이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Rethinking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during Japan's  
Protectorate Rule in Korea(1905-1910)

Lee, Hunmi \*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interpret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during Japan's Protectorate Rule in Korea (1905-1910) as an enlightenment reform movement and intricate product of global diffusion, including the 18th century European liberalism and other translated and mediated Western influences, with its ambiguous political implications between nationalism and colonialism. Both theory and practice of the movement was under Euro-American and Japanese hegemony, but at the same time, diverse discursive tactics were adopted to appropriate it.

My aim is to map out a historical structure of knowledge diffusion and examine its political role in the case of early modern Korea. Accordingly, I review the main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constitutional monarchy vs. republic and cultural reform movement vs. anti-imperial fighting with a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transformation of elites and their changing relations to the state and society befor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Key Words : patriotism, enlightenment, reform movement, Korea 1905-1910, constitutional monarchy, nationalism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